스텔스 오미크론 감염률, 오미크론보다 30% ↑…중증화 비슷

전세계 40여개국에 확산…영국·덴마크에선 이미 우세종
소트로비맙은 효과 없지만 다른 치료약들은 치료 잘돼

전염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덕분에 전세계가 서서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40여개국에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BA.2 변이는 얼마나 위험할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BA.2 변이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했다.

◆BA.2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란.

BA.2 변이는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다. 두 변이 모두 같은 시기에 발생했고 같은 계통이다. 변이의 대부분이 같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에 나타나는 약 20개의 변이만 다르다. 두 변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를 일으키며 한가지 변이 내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 현상이다. 초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밀려나기 전까지 200여종의 하위 변이가 있었다.

◆BA.2 변이의 증상은.

BA.2 변이가 오미크론(BA.1)과 현저하게 다른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BA.2 변이 감염률이 매우 높은 덴마크의 국영 혈청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BA.2와 BA.1 사이에 입원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두 변이 사이에 입원률과 증증화율에 차이가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A.2의 전염률이 BA.1보다 30% 가량 높다고 밝혔다. BA.2 변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햄스터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BA.2가 BA.1보다 허파에 더 잘 침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2 변이의 치료효과는.

미 뉴욕대 세균학자 나타니엘 랜더 교수 연구 결과 BA.1보다 BA.2에 단일항체치료제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BA.2가 크게 확산하는 매서추세츠주와 뉴욕주 등지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 항체치료제 소트로비맙 사용을 금지했다.

길리어드사 렘데시비르와 머크사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사 팍스로비드 모두 BA.2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실렸다.

백신의 예방효과는 BA.1과 BA.2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두 변이 사이의 차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 이외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보건국 연구 결과 백신의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경우 신체가 유사 변이를 모두 식별해 중증화하는 것을 막아준다.

◆BA.2 변이는 어느나라에 확산돼 있나.

미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자의 99.9%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이며 이중 지난주까지 BA.2 변이 감염자가 50%에 달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70%까지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에 BA.2 변이가 확산돼 있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BA.1보다 BA.2 변이 감염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영국도 3월 현재 전체 코로나 감염자 5명중 4명이 BA.2 변이 감염자로 보건국이 평가하고 있다.

◆BA.2 변이를 걱정해야 하나.

아니다. WHO는 지난해 11월 오미크론을 "우려 대상 변이"로 지정했지만 BA.2에 대해

선 특별히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델타 변이와 베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모두 "우려 대상 변이"인데 비해 람다와 뮤 등 다른 변이들은 "관심대상 변이"로 지정돼 있다. 관심대상 변이들은 델타 등 "우려대상 변이" 처럼 우세종이 되지 못했다.

◆BA.2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델타 변이 등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확인하는 세가지 유전자 코드 뭉치가 모두 나타나는데 비해 BA.1은 두가지 유전자 코드 뭉치만 나타난다. 덕분에 BA.1은 검사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에 비해 BA.2는 PCR 검사에 세가지 유전자 코드 뭉치가 모두 나타난다. 이 차이를 두고 일부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렀다.

박남진 기자

위중증 환자 진료비 수천만원…정부는 추가지원 '난색'

이달 초부터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 후 치료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떠안게 됐다는 환자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이외의 합병증·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 3000만원 저소득층 재난 의료비 지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된 (위중증)환자의 경우 당초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 영역에 대해 건강보험 원리가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일부,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치료비가 소폭 발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용 부담도 차상위 계층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통해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통상 가동되고 있다. 환자들이 그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간 2000만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과중한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도 7일 후 격리가 해제되면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더라도 일반 병상으로 옮겨져 중환자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에게는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일부 위중증 환자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국가의 코로나19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진료비 부담을 덜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게는 1000만원대, 많게는 4000만~5000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위중증 환자 가족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모임'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이슬 기자

교사들도 日 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전교조·교사노조연맹, 규탄 성명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한 서술을 삭제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우리나라 교단에서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30일 논평을 내고 "전범국의 과거를 사죄하기는 커녕 거짓을 가르치고 전쟁 책임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수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자국의 학생들을 성찰 없는 괴물로 키우지 않으려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과거의 잘못까지 빠짐없이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는 한·일 관계는 물론 아시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자국의 부정적인 역사는 지우는 한편, 자국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검정 결과를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교과서 역사 왜곡은 청소년들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여 이웃 국가와 협력하면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두 교원노조는 교단에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교육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민간단체들과 연대해 역사 왜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9일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과 교과서 31종 중 21종에서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억지 주장이 강화되거나,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동원 등 제국주의 시대 강제성을 띄는 서술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적극 교과서에 반영됐다.

우리 정부는 당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와 교육부 명의의 성명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선옥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